장지, 사저 50m 떨어진 야산으로 결정

盧 前대통령 서거

경복궁 흥례문 앞뜰서 영결식
화장지는 수원 연화장 확정
발인 시간 앞당겨 오전 5시

26일 오전 권양숙 여사와 형 건평씨 등 관계자들이 지관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지로 정해진 봉하마을 사저 뒤편 야산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을 29일 오전 11시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장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주관할 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가장 큰 장의 절차 가운데 하나인 영결식 일시·장소를 확정함으로써 장의를 위한 큰 줄기를 잡았다.

국장(國葬)이나 국민장의 선례를 보면 통상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고문, 부위원장, 위원, 집행위원,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대표, 친지, 기타 저명인사가,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각각 맡고, 위원은 3부의 장관급 이상과 국가유공자단체, 사회 각계 단체 대표 등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지가 사저 옆 야산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노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가족이 가족회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옆인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번지 일대를 장지로 정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사저에서 서쪽으로 50여m 떨어진 이곳은 전체 660㎡ 규모로 이중 100㎡ 정도에 비석을 세우고 노 전 대통령의 유해를 안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양숙 여사 등 유족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사저 부근 땅을 둘러본 경남 김해지역의 유명 지관인 구모(80) 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지는 관광지와 선산을 겸하는 휴식처 같은 곳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구 옹은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관광지 겸 선산으로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봉하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사저 등을 둘러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옹은 노 전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이 잠들어 있는 봉하마을 입구의 선영 자리를 봐주는 등 노 전 대통령측과 수십년간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그는 "그 자리는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권양숙 여사와 함께 (관광지 겸 선산으로) 이야기했던 곳"이라며 "이 곳에 오면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구 옹이 둘러본 곳은 노 전 대통령이 귀향 초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와 '대통령님 나와주세요'라고 외치면 사저 바깥으로 나와 방문객들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던 장소와 인접해 있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장지로는 봉하마을 선영과 봉화산 등이 거론돼왔으나 유가족들이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만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사저 옆 야산을 장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29일 오전 6시로 예정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인시각이 오전 5시로 앞당겨졌다. 유민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26일 "발인시각을 오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을 화장할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 연화장으로 확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이럴 수는 없다"

강금원 등 석방 측근들 문상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법원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김해 봉하마을 빈소를 찾았다.

구속된 지 4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럴 수는 없다"고 흐느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초췌한 모습에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강 회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노 전 대통령은 자존심이 매우 강했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세 명 모두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연합뉴스

"흉터 등 허물 그대로 드러난 그림 선택"

盧 前 대통령 초상화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청와대의 의뢰로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사진〉를 그렸던 수묵화가 김호석(52)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가 26일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 제작에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청와대의 의뢰를 받아 2007년 청와대에서 직접 노 전 대통령을 만나 그림을 그렸고 2008년 퇴임 직전 그림을 전달했던 김 교수는 "크기가 똑같은 그림을 두 점 그리고 선택하라고 했죠. 하나는 사실적으로, 하나는 이상화된 그림이었죠.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왼쪽 눈썹에 권양숙 여사와 본인만이 알고 있고 형제간에도 모르는 흉터가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잡았느냐고…. 그러더니 사실적인 그림을 선택하더라고요. 자신의 허물까지 감추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모습이 느껴졌다"며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니 마음이 무겁다고 애도했다. /연합뉴스

2015 U대회 성공 개최

개최 예산만 4천억원 재정지원 특별법 시급

❷ 정부 전폭 지원 절실

광주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라는 쾌거를 일궈냈지만 정부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 등 성공대회 개최를 위해 넘어야 한 산이 많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U대회를 주최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대회 개최 예산으로 2억4천200만 유로(한화 4천100억원 상당)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했다.

조건은 이 금액의 80% 가량인 3천280억원을 지자체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는 상태에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시로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없다는 얘기인 셈이다.

광주는 16개 대학의 대학스포츠 시설이 풍부하지만 현지실사 과정에서 FISU측이 지적한 것처럼 시설보완이 필수적이다. 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42개소 가운데 전남지역 19개 시설을 국제 규격에 맞춰 더욱 완벽한 시설로 전면 개보수할 경우 추가 예산의 소요가 불가피하다.

또 광주시가 대회 유치 과정에서 경쟁 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제시한 파격적인 항공료, 선수단 체재비 등 인센티브도 부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U대회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대회 준비와 관련한 중앙 정부의 전폭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서 통상 국가 50%, 지자체 50% 등 일반적인 지원을 고수할 경우 사실상 대회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대구도 정부 지원법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다. 또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도 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도 지난해 2월 특별법이 제정돼 SOC 건설 등 박람회 준비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의 토대가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지난 23일(벨기에 현지시간)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FISU집행위원들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시는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길 고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도 U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대회 유치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20표 이상 획득 에드먼턴 압도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광주시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개최지 표결에서 몇 표를 얻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FISU는 개최지 결정 표결에서 도시별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민감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개최 도시만을 발표한다.

그러나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관계자의 자체 분석결과 표결에 참가한 27명의 FISU 집행위원 가운데 22명 가량이 광주시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KUSB는 FISU의 회원기구다.

광주시도 최소 20표 이상을 확보하는 등 캐나다 에드먼턴과 대만 타이베이를 압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유치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FISU 주변인 및 유력한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로부터 이같은 표결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악의 경우 27표 가운데 개최지 결정의 마지 노선인 14표를 예상했으나,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유럽측 집행위원들이 광주에 몰표를 준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27명 집행위원 가운데 13명이 몰려있는 유럽표를 효과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최소 20표 이상이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표결 결과를 공식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광주시가 압도적으로 지지표를 얻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